

**22**-**4**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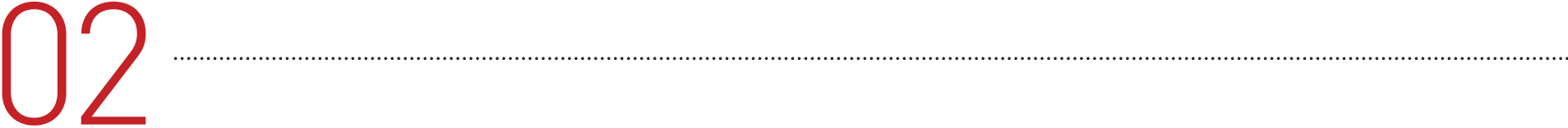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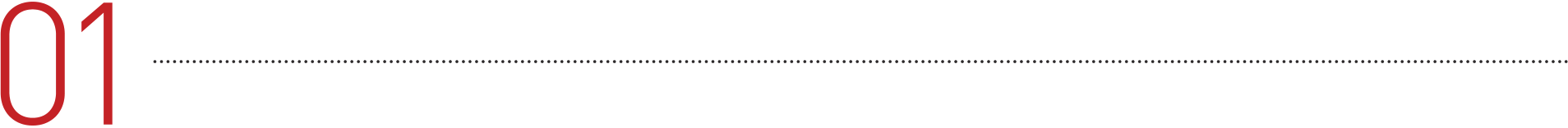
**2022.12.**

**발행인** 박용주 **발행처**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(남대문로5가 537) 메트로타워 **T** 02)6908-8200 **F** 02)6312-8959

**작성** 박정화 부연구위원 **기획**·**조정** 심혜인 결산정보분석부장 **편집간사** 우수연 연구원

중앙-지방 간 재정조정제도

**1**들어가며  
**2**중앙-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의 개념 및 용어 정의  
**3**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및 재원이전 현황  
**4**중앙-지방 간 재정조정 관련 주요 현안  
**5** 나가며



|  |  |
| --- | --- |
| 중앙-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|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은 결국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의 재원 배분의 문제이며 중앙과 지방 |

|  |
| --- |
| 사이의 재원 배분 문제이다.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의 재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지방재정조정 |

|  |
| --- |
|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. 오늘날 분권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|

|  |
| --- |
|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.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. |

|  |
| --- |
|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-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. 이를 위해 재정조정의 주요 이전재원 |

|  |
| --- |
|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.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|

|  |
| --- |
| 수행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방향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다. |

**들어가며**

**중앙-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의 개념 및 용어 정의**

**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과 유형**

 (개념과 목표)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시정, 지역 간 외부 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지방공공재 공급,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목적으로 재정을 조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**1)**  
 - 정부 간 재원이전을 통해 지역 간 산업 혹은 경제 기반의 차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방정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 (유형)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(수직적)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(수평적)에 재정을 재배분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운영  
 - (수직적 재정조정제도) 정부 층위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과 자체수입 간 차이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-지방 간 또는 광역-기초 간에 지방교부세, 국고보조금, 조정교부금(자치구 조정교부금, 시·군 조정 교부금) 재원을 이전함  
 -   
(수평적 재정조정제도)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상호 간의 재원(지역상생발전기금, 재산공동과세)을 재배분하는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**ISSUE왜 중앙­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?** | 방식 |
|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출책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일종의 제도 |

적 장치에 해당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-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여 중앙-지방 간 수직적 불균형 완화 또는 재정력 격차 완화를 통해 국가 | <표 1>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과 구분 |
|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수직적 | |  | | --- | | **구 분** |   중앙-지방 간 | **재원**  지방교부세 | **재원 유형(재원이전 대상)**  보통교부세 | **재원 특징** 일반 | | 특별교부세 | 특정 | | 부동산교부세 | 일반 | | 소방안전교부세 | 특정 | | 국고보조금 | 일반보조금 | 특정매칭 | |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| 포괄매칭, 특정공모 | | 광역-기초 간 | 조정교부금 | 자치구 조정교부금 | 일반, 특정 | | 시·군 조정교부금 | 일반, 특정 | | 시·도비 보조금 | | 특정 | | 수평적 | 광역 간 | 상생발전기금 | | 일반 | | 기초 간 | 서울시 재산세(공동세) | | - | |
| 재정의 재배분 목적을 충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지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|
|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위주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구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|
|  | 이루기 위해 재정조정제도의 중심축인 이전재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중요 |
| -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재원으로 지방 |
| 자치 실현에 중요한 일반재원에 해당 |
| -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세출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해당하는 교부금으로 예산의 배분에 관하여 중앙 |
|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이해관계가 높은 사안 |
| **FOCUS중앙­-지방 간 재정조정 관련 주요 쟁점은?** |
| 이전재원을 통한 중앙-지방 간 재정력 격차 완화와 재원의 배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|
| - 지방교부세의 핵심인 보통교부세의 법정률과 국고보조금의 재원 분담 및 관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전 |
| 재원의 재정조정 기능과 나아갈 방향 모색 |
| **자료**: 탁현우(2022)를 기반으로 허등용(2018)과 김성주·윤태섭(2019)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함. |

- 사회복지 정책수요의 증가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사무 분담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적인 예방조치가 필요 |  | **1)** 국회예산정책처(2022), p.226. |  |

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우리나라의 중앙-지방 간 재정조정제도2)** |  | (지방교부세) 중앙정부의 세입 중 일부를 재정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필요 |
| (특징)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| 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수단의 역할을 함 |

수직적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
 - 우리나라에서 정부 간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대표됨  
 -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부 간 재정관계 에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공통점을 가짐**3)**  
 - 다만 지방교부세는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한편,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 관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**4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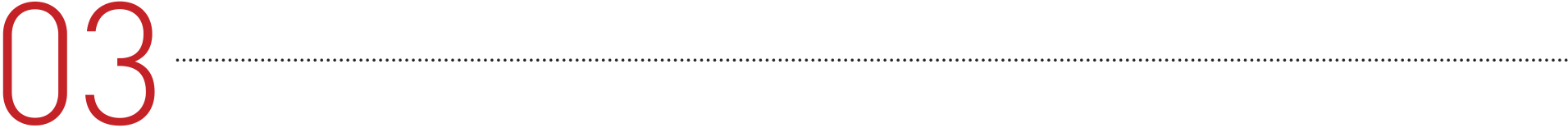
- (기능) 국가와 지방 간 재원 재배분 방안의 하나로 수직적 재원 불균형을 보완함  
 - (특징)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 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짐**5)**  
 - (종류) 4개의 교부세로 구성되며 상호 간 다소 상이한 기능을 수행  
 보통교부세: 내국세의 19.24% 중 97%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(자치구 제외)에 교부하며 지역 불문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  
 특별교부세: 내국세의 19.24% 중 3%를 기반으로 보통교부세에 미반영된 불규칙적인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보통교부세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  
 부동산교부세: 종합부동산세 전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며 중앙정부를 통해 세원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<표 2> 중앙-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: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 |  | 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 |
|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| |  | | --- | | **구 분** |   근거법령 | **지방교부세** 「지방교부세법」 | **국고보조금** 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 | | 재원 구성 | - 내국세의 19.24%  • 보통교부세: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%  • 특별교부세: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% - 부동산교부세: 종합부동산세 전액 - 소방안전교부세: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% |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| | 용도 | - 보통부동산교부세: 용도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- 특별교부세: 용도지정, 조건부여 가능 - 소방안전교부세: 특수수요는 용도지정 가능  • 소방 분야에 교부세 총액의 75% 이상 사용 규정 |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목적 재원으로 운용 | | 배분 방법 | - 보통교부세: 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·교부- 특별교부세: 지역현안, 재난안전관리, 국가 지방협력수요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 로 심사하여 사업별·시책별로 교부 - 부동산교부세: 재정여건, 사회복지, 지역교육, 보유세 규모 등에 따라 산정·교부 - 소방안전교부세: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,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,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산정·교부 | 소관 부처별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부예산으로 정함 | | 성격 | - 보통·부동산교부세: 일반재원(자주재원) - 특별교부세: 특정재원(자주재원) - 소방안전교부세: 일반 및 특정 재원(자주재원) | 특정재원(이전재원) | | 소방안전교부세: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%를 기반으로 소방·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소요의 요소를 고려 |
| 하여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교부 |
| (국고보조금) 국가와 지방 간 서로 이해가 얽혀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무(사업)를 실시하기 위해 일정한 |
| 행정 수준의 확보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수단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 |
| 정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해당**6)** |
| - (기능) 과거 정부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보조의 기능이었으나 점차 중앙-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격차를 |
| 보조하는 기능을 포함 |
| - (특징)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조건부 교부금에 해당 |
| 각종 용도와 수행 조건 등을 지정해서 교부하는 특정 재원으로 보조자의 시책을 강요하는 조건부 교부금의 |
| 성격을 가짐 |
|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집행에 대한 재정통제 및 행정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집행 경과에 대해 중앙정부의 |
| 승인이 필요 |
| - (구분)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(정률보조금, 정액보조금)과 지급하는 목적(교부금, 부담금, 협의의 보조 |
| 금) 등으로 구분**7)** |

**주**:소방교부세율은 2018년 20%에서 2020년 45%로 인상.

**자료**:행정안전부(2022.5.),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(상)」 , p.70.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2)**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재원은 단체 유형에 따라 ‘중앙정부-지방자치단체 간’ 그리고 ‘중앙정부-교육지방자치단체 간’으로 살펴볼 수 있다. 본 글에서는 정부 |  | **5)**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함. |
| **6)**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, 교부금, 조성비, 장려비,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, 실무적으로 |
| 간 재정관계의 이전재원 수단을 대표하는 ‘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’에 초점을 맞춰 중앙-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. |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다(기획재정부, 2022). |
| **3)** 기획재정부(2022), p.4. | **7)** 정률보조금(Matching Grants)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비용의 일정 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 형태에 해당하는 |
| **4)** 기획재정부(2022), p.3. | 반면에 정액보조금(Lump-Sum Grants)은 특정한 사무, 사업의 실시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다(기획재정부, 2022). |
|  |  |



|  |  |
| --- | --- |
| **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및 재원이전 현황8)** | -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(국고보조금+시·도비보조금)은 2021년(118조 7,213억원) 대비 11.0%가  증가하였으며, 지난 5년간 꾸준히 규모가 증가함 |

- 2022년 당초예산 순계 기준 지방교부세는 약 58조원으로 전체 지방재정 수입의 20.3%를 차지하며, 보조금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**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** | (국고보조금+시·도비보조금)은 약 73조원으로 전체 지방재정 수입의 25.4%를 차지함 |
| 2022년 중앙정부 총지출(본예산)은 607.7조원이며, 세입예산(일반회계+특별회계) 순계는 455.8조원 규모 |

 2022년 세입예산(일반회계+특별회계) 순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88.3조원, 지방교육은 82.7조 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 총합의 34.9%, 10%를 각각 차지

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 간 이전재원을 공제한 후, 실제 재정사용액 비중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이 각각 40.8%, 45.0%, 14.3%를 차지

|  |  |
| --- | --- |
| <표 3>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비교 | (단위: 조원, %) |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중앙정부 총지출 | | |  | | --- | | **2017** |   400.5 | **2018**  428.8 | **2019**  469.6 | **2020**  512.3 | **2021**  558.0 | **2022**  607.7 |
| 예산서상 규모 | 중앙정부 | 303.1 | 330.8 | 361.8 | 386.2 | 417.4 | 455.8 |
| (비중) | (54.6) | (54.4) | (54.5) | (54.1) | (55.5) | (55.1) |
| 지방자치단체 | 193.2 | 210.7 | 231.0 | 253.2 | 263.1 | 288.3 |
| (비중) | (34.8) | (34.7) | (34.8) | (35.5) | (35.0) | (34.9) |
| 지방교육 | 59.0 | 66.2 | 70.6 | 73.9 | 71.9 | 82.7 |
| (비중) | (10.6) | (10.9) | (10.7) | (10.4) | (9.5) | (10.0) |
| 재정사용액 | 중앙정부 | 169.1 | 181.3 | 191.3 | 216.4 | 241.4 | 250.8 |
| (비중) | (40.0) | (39.5) | (38.5) | (40.7) | (42.8) | (40.8) |
| 지방자치단체 | 190.8 | 208.0 | 230.6 | 239.6 | 248.4 | 276.6 |
| (비중) | (45.1) | (45.4) | (46.4) | (45.0) | (44.0) | (45.0) |
| 지방교육 | 63.0 | 69.4 | 75.4 | 76.1 | 74.6 | 87.7 |
| (비중) | (14.9) | (15.1) | (15.1) | (14.3) | (13.2) | (14.3) |

|  |  |
| --- | --- |
| <표 4>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| (단위: 억원, %) |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 분 | | |  | | --- | | **2018** |   예산액 | **20**예산액 | **19**  전년 대비 | **20**예산액 | **20**  전년 대비 | **20**예산액 | **21**  전년 대비 | **20**예산액 | **22**  전년 대비 |
| 계 | | 2,106,784 (100) | 2,310,152 (100) | 9.7 | 2,532,263 (100) | 9.6 | 2,630,917 (100) | 3.9 | 2,883,083 (100) | 9.6 |
| 자체수입 | | 1,006,057 (47.8) | 1,044,104 (45.2) | 3.8 | 1,150,043 (45.4) | 10.1 | 1,167,479 (44.4) | 1.5 | 1,328,144 (46.1) | 13.8 |
| 이전수입 | | 858,760 (40.8) | 982,652 (42.5) | 14.4 | 1,101,193 (43.5) | 12.1 | 1,187,213 (45.1) | 7.8 | 1,317,281 (45.7) | 11.0 |
|  | 지방교부세 | 378,699 (18.0) | 432,954 (18.7) | 14.3 | 493,705 (19.5) | 14.0 | 492,632 (18.7) | △0.2 | 584,825 (20.3) | 18.7 |
| 보조금 | 480,061 (22.8) | 549,698 (23.8) | 14.5 | 607,488 (24.0) | 10.5 | 694,581 (26.4) | 14.3 | 732,456 (25.4) | 5.5 |
| 지방채 | | 19,905 (0.9) | 37,287  (1.6) | 87.3 | 55,605 (2.2) | 49.1 | 65,442 (2.5) | 17.7 | 40,343 (1.4) | △38.4 |
| 보전수입 등및 내부거래 | | 222,062 (10.5) | 246,108 (10.7) | 10.8 | 225,423 (8.9) | △8.4 | 210,783 (8.0) | △6.5 | 197,315 (6.8) | △6.4 |

**주** 1) 당초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함.

2) ( )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해당 재원의 비중임.

3) 이전수입을 구성하는 중앙정부-자치단체 간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적게 반영한 금액으로 그 차이가 있음.**자료**: 행정안전부(2022.5.),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(상)」 , p.31을 참고하여 작성함.

**중앙-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이전 현황**

 2022년 기준 재원이전 전체 금액인 140조 229억원 중 지방교부세가 43.2%(65조 560억원), 국고보조금

56.8%(79조 4,669억원)를 차지

**주** 1) 중앙정부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임. - 중앙정부가 재정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2) [중앙정부-지방자치단체-지방교육의 예산규모]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규모의 비교를 위해 중복계상을 공제한 순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예산서상의 규모와   
 재정사용액을 반영함.

3) 구성 항목별 예산규모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.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자료**:기획재정부, 열린재정(www.openfiscaldata.go.kr, 검색일: 2022.10.25. 기준)  행정안전부(2022.5.),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(상)」, p.24를 참고하여 작성함.  **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별 예산규모** | | <표 5>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이전 추이(2013~2022) | (단위: 억원, %) |
|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계 | **2013**  672,260 (100%) | **2014**  757,079 (100%) | **2015**  799,859 (100%) | **2016**  821,758 (100%) | **2017**  871,632 (100%) | **2018**  961,568 (100%) | |  | | --- | | **2019** |   1,113,062 (100%) | **2020**  1,178,023 (100%) | **2021**  1,265,563 (100%) | **2022**  1,400,229 (100%) | | 지방교부세 | 355,359 (49.1%) | 356,982 (47.2%) | 348,881 (43.6%) | 361,324 (44.0%) | 407,314 (46.7%) | 459,805 (47.8%) | 524,618 (47.1%) | 522,068 (44.30%) | 517,547 (40.9%) | 650,560 (43.2%) | | 국고보조금 | 341,965 (50.9%) | 400,097 (52.8%) | 450,978) (56.4%) | 460,434 (56.0%) | 464,318 (53.3%) | 501,763 (52.2%) | 588,444 (52.9%) | 655,955 (55.70%) | 748,016 (59.1%) | 794,669 (56.8%) | | |
|  |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46.1%, 이전수입이 45.7%를 차지하며 중앙정부의 이전 |
| 재원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자체수입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가리킴 | |

**주** 1) 본 예산 기준임(자치단체의 각 연도별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아니고,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기준).  
 2) 행정안전부의 각 연도별 통합재정 개요를 기반으로 김우림(2021)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반영함.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8)**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별 예산 규모와 현황, 지방교부세의 종류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(상)」과 「2022년 | 3)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유아교육특별회계교부금을 제외한 자치행정 분야의 지방이전재원만을 명시함. |  |
| 지방교부세 산정해설」을 참고하였으며, 국고보조금의 분야 및 부문별 현황과 추이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과 e-나라도움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였다. | **자료**: 행정안전부, 각 연도별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」를 참고하여 재작성함. |
|  |

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**지방교부세 현황** | -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고보조금은 증가하는 추세이며, 국고보조금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1.3%, 정부 |
| (종류별 교부 현황 및 추이) 2022년 기준 약 65조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가 55조원, 특별교부세가 1.7조 |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9.1%로 나타남 |
| 원, 부동산교부세가 7.3조원, 소방안전교부세가 0.8조원 교부됨 | -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7% 내외를 차지 |

- 보통교부세는 2019년 52.6조원에서 2020년 44.9조원으로 전년 대비 7.7조원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51.3조원으로 상승 | <표 7>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정부총지출(예산 기준) 추이(2018~2022) | (단위: 조원, %) |

- 특별교부세도 정률분 교부세 감소에 따라 2019년 1.6조원에서 2020년 1.3조원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1.5조

원으로 상승

-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2019년 2.9조원에서 2021년 5.2조원으로 상승

|  |  |
| --- | --- |
| <표 6> 지방교부세 종류별 현황 및 추이(2013~2022) | (단위: 백만원) |

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2013 | |  | | --- | | **합계** |   35,724,592 | **보통교부세**31,558,105 | **특별교부세** 1,314,921 | **분권교부세** 1,688,560 | **부동산교부세**1,163,006 | **소방안전교부세**- |
| 2014 | 35,698,180 | 31,884,524 | 986,119 | 1,688,437 | 1,139,100 | - |
| 2015 | 34,888,072 | 32,176,185 | 987,407 | - | 1,410,400 | 314,080 |
| 2016 | 37,967,278 | 35,023,661 | 1,083,206 | - | 1,445,711 | 414,700 |
| 2017 | 44,363,917 | 41,032,266 | 1,269,038 | - | 1,549,126 | 513,487 |
| 2018 | 49,044,581 | 45,211,842 | 1,398,305 | - | 2,017,174 | 417,260 |
| 2019 | 57,709,283 | 52,602,827 | 1,626,892 | - | 2,942,062 | 537,502 |
| 2020 | 50,322,101 | 44,926,519 | 1,389,478 | - | 3,320,970 | 685,134 |
| 2021 | 59,169,926 | 51,331,840 | 1,587,583 | - | 5,215,345 | 1,035,158 |
| 2022 | 65,056,020 | 55,104,201 | 1,704,254 | - | 7,382,800 | 864,765 |

**주** 1) 2021년까지는 최종교부액(당초예산+추경예산+정산분)이며, 2022년은 당초예산 기준임.

2) 2005년에는 증액교부금 폐지, 분권교부세·부동산교부세 신설.

3) 2015년은 분권교부세 폐지, 소방안전교부세 신설.

**자료**: 행정안전부(2022.5),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(상)」, p.74.

 (보통교부세의 비중) 지방교부세 제도를 대표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
-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통해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, 2022년 기준 전체

지방교부세 중 약 84.7%를 차지

- 이외 부동산교부세 11.3%, 특별교부세 2.6%, 소방안전교부세 1.3%를 차지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|  | | --- | | **구 분** |   보조금 규모(조원) | | **2018**   66.9 | **2019**   77.9 | **2020**  86.7 | **2021**  97.9 | **2022**   102.3 | **연평균증가율**11.3% |
|  | •자치단체보조 | 50.2 | 58.8 | 65.6 | 74.8 | 79.4 | 12.2% |
| •민간보조 | 16.8 | 19.1 | 21.1 | 23.1 | 22.9 | 8.2% |
| 정부총지출(조원) | | 428.8 | 469.6 | 512.3 | 558.0 | 607.7 | 9.1% |
| 정부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| | 15.6% | 16.6% | 16.9% | 17.5% | 16.8% | 1.9% |

**주** 1) 국회예산 확정 기준임.

2) e-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기반함.

**자료**:기획재정부(2022.9.), 「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(Ⅰ)」, p.13.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을 일부 참고하여 작성함(www.openfiscaldata.go.kr, 검색일: 2022.10.25. 기준).

 (분야 및 부문별 현황) 2022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가 약 55.7조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중 절반 이상인

54.4%의 비중을 차지

- 농림수산 분야가 약 10.9조원(10.6%), 환경 분야가 7.9조원(7.7%), 산업·중소기업 분야가 7.6조원(7.4%), 문화

및 관광 분야가 5.5조원(5.4%) 순으로 규모가 큼

- 저출산·고령화의 심화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기초연금, 영·유아보육료, 가족양육수당 등 사회

복지 분야 지출 증가에 기인**9)**

|  |  |
| --- | --- |
| <표 8> 2022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비중 | (단위: 억원, %) |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분야** | **사회복지** | **농림수산** | **환경** | **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** | **문화 및 관광** | **교통 및 물류** | **보건** | **국토 및**  **지역개발** |
| 억원 | 556,716 | 108,937 | 79,027 | 75,668 | 55,002 | 40,707 | 32,701 | 21,004 |
| % **분야** | 54.4   |  | | --- | | **일반·지방 행정** | | 10.6**공공질서 및 안전** | 7.7**통일·외교** | 7.4**교육** | 5.4**통신** | 4.0**과학기술** | 3.2**국방** | 2.1**합계** |
| 억원 | 16,840 | 12,746 | 10,608 | 10,057 | 1,795 | 1,191 | 465 | 1,023,464 |
| % | 1.6 | 1.2 | 1.0 | 1.0 | 0.2 | 0.1 | 0.0 | 10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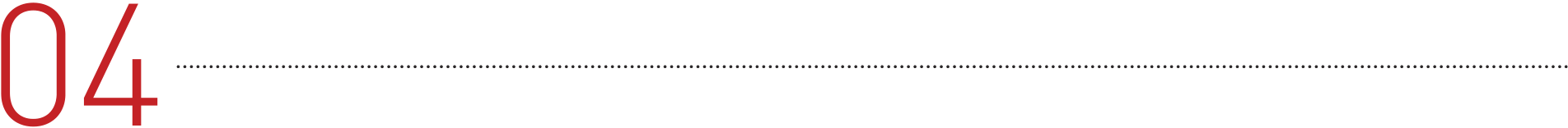
**주**: 국회 확정예산 기준임.

**자료**: 기획재정부, e-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www.gosims.go.kr, 검색일 : 2022.10.25. 기준)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**국고보조금 현황** | -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 부문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확대와 지급 규모의 증액으로 인하여 가장 큰 비중 |
| (규모 및 정부총지출 추이) 2022년 중앙정부 본예산 607.7조원 중 102.3조원(16.8%)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| (33.1%)을 차지 |

4.4조원으로 증가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-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는 약 77.6%(79.4조원), 민간보조는 22.4%(22.9조원)을 차지 |  | **9)** 이재완 외(2021), p.8. |  |
|  |

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<표 9> 2022년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예산편성 규모 | (단위: 억원, %) |  | -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정부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도출 |
|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**부문**  억원 | **노인**  184,073 | **기초** **생활보장**  167,551 | **아동·** **보육**  91,618 | **취약계층지원**  44,236 | **고용**  29,200 | **주택**  18,814 | **여성·가족·청소년**  12,530 | **사회복지일반**  5,899 | **보훈**  2,135 | **노동**  661 | **합계**  556,716 | | % | 33.1 | 30.1 | 16.5 | 7.9 | 5.2 | 3.4 | 2.3 | 1.1 | 0.4 | 0.1 | 100 | | | 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|
| (보통교부세 조정률) 2017~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0.9 미만의 조정률을 가리킴 |
| -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2006년 인상 이후 변동 없이 현재와 같이 19.24%로 유지되는 상태 |
| - 조정률은 2013~2019년까지 0.850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1년까지 0.739로 하락하였으며, 2022년 소폭 |
| **주** 1) 국회 확정예산 기준임. | |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0.9 미만을 가리킴 |
| 2) 합계의 경우 반올림으로 인하여 세부항목의 합계와 차이가 있음. | |

**자료**: 기획재정부, e-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www.gosims.go.kr, 검색일 : 2022.10.25. 기준).

**중앙-지방 간 재정조정 관련 주요 현안**

**(지방교부세) 사회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법정률10)과 조정률에 관한 논의**

- 다만 매년 보통교부세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보다 적어 부족재원의 조정률만큼을 보전하고 있음

|  |  |
| --- | --- |
| <표 10> 보통교부세 재원, 재정부족액, 미충족분, 재원충족률 추이 | (단위: 조원) |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|  | | --- | | **구분** |   재정부족액(a) | **2013**  34.3 | **2014**  35.4 | **2015**  35.6 | **2016**  35.8 | **2017**  38.5 | **2018**  44.7 | **2019**  53 | **2020**  53.9 | **2021**  56.4 | **2022**  61.7 |
| 보통교부세 총액(b) | 30.5 | 30.9 | 30.8 | 32.1 | 36.2 | 40.9 | 45.8 | 45.0 | 42.9 | 55.1 |
| 미충족분(a-b) | 3.8 | 4.5 | 4.8 | 3.7 | 2.3 | 3.8 | 7.2 | 8.0 | 13.5 | 6.6 |
| 조정률 | 0.890 | 0.873 | 0.867 | 0.897 | 0.941 | 0.915 | 0.864 | 0.836 | 0.739 | 0.860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복지정책 확대, 중앙-지방이양 사무 증가로 인한 지방대응비 부담분 등 사회정책 변화로 인한 재정수요 | **주** 1) 각 연도 당초예산 기준. |
| 2)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금액임. |
|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확보에 대한 논의 진행 중 | **자료**: 행정안전부, 각 연도, 「지방교부세 산정 해설」을 바탕으로 작성함. |

- 기초연금 도입,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부문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상향조정에 관한 논의 진행 중인 상태**11)** |  | 보통교부세의 법정률과 조정률에 관한 논의는 거시적 범위에서의 제도 개편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|

- 이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,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,

지방세 수입 감소 등에 기인함

협조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해당함  
 - 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재정부족액을 보전 가능한 수준으로의 법정률 인상 논의는 거시적 범위의 제도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(보통교부세 법정률) 지방교부세 중 규모가 가장 큰 보통교부세는 「지방교부세법」에 근거하여 법률에 정해진 | 개편에 해당하기에 수치의 구체적 근거 및 산출 과정이 명시된 적정 법정률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**14)** |
| 내국세 총액의 19.24% 중 97%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구성됨**12)** | - 조정률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재고 시, 사회복지수요와 보통교부세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|
| - 보통교부세는 매년 내국세의 신장률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기 변동 및 교부세 법정률의 변동 여하에 | 있음**15)** |
| 따라 변화가 있음 | - 또한 복지대상자의 비율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수요액을 산정하게 되는 바, 산정 결과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|

- 법정률은 재정보전의 강화를 목적으로 초기(1983년) 13.27%에서 2000년 15%, 2005년부터 19.13%, 2006년

부터 내국세의 19.24% 수준으로 증가함**13)**

- 보통교부세의 규모는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약 31조원에서 55조원으로 1.8배가량 증가

수요산정 방식 등의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**16)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10)** 법정교부세율 또는 법정률로 지칭되나, 본 글에서는 ‘법정률’로 약칭한다. |  | **14)**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에서 제시하는 적정 지방교부세율은 20.24%~26.14%로 약 1%p~7%p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, 수치의 구체적 근거나 산출 과정이 |
| 포함되지 않음을 언급하였다(탁현우, 2022). |
| **15)**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수요액으로 측정항목별로 일정한 공식에 의해 산출되는 |
| 기초수요액(4개 측정항목 및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)과 규정에 따른 보정수요액으로 구분된다. 보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으로 반영할 수 없는 수요, 지역의 |
| **11)** 제21대 국회 지방교부세법 법률개정안 내역을 살펴본 결과(’22년 7월 기준), 2023년까지 지방교부세율을 23%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, 이외 |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, 인구 규모 및 자연조건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 등을 대상으로 하며, 법정수요, 지역균형수요, 사회복지수요, 지역관리수요 |
| 22.14%, 25.24%, 26.14%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의안으로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(탁현우, 2022). | 등으로 나누어진다. |
| **12)**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·부동산교부세·소방안전교부세는 특수하고 고유한 수요를 반영하므로, 본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| **16)** 사회복지수요액은 복지대상자의 비율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대상자가 매우 많더라도 인구 규모가 충분히 클 경우, 사회복지 대상자가 적은 |
| 일반재원을 보전해 주는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논의한다. | 자치단체보다 산정된 수요액이 작아지는 모순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산정 결과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수요산정 방식의 세항목별 일관성 확보 여부와 |
| **13)** 류영아(2020), p.4. | 자치단체별 분포 형태의 경향성 등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(김필헌, 2014; 주만수, 2021; 탁현우, 2022). |
|  |  |

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(국고보조금)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확대와 재원분담 및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** | <표 12> 연도별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추이 | (단위: 억원, %) |
|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이 부담하는 대응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이 사회 | | 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합 계 | |  | | --- | | **2018** |   669,412 | **2019**   778,979 | **2020**  867,427 | **2021**  978,545 | **2022**   1,023,464 | | 예산액(억원) | 378,307 | 460,974 | 511,814 | 560,407 | 556,716 | | 비중(%) | (56.5) | (59.2) | (59.0) | (57.3) | (54.4) | | |
| 복지비의 증가로 중앙-지방 간 재정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|
| 이슈임**17)** |
| - 2021년 기준 국고보조금 규모 상위 10대 사업 중 7개(기초연금 지급, 의료급여경상보조, 생계급여, 영·유아 |
| 보육료 지원, 아동수당지급, 주거급여 지원, 장애인활동지원 사업)가 의무지출 사업에 해당함**18)** | **주** 1) 2018~2020년은 결산 기준, 2021~2022년은 본예산 기준. | |

2) ( )는 전체 국고보조금(총 15개 분야) 중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을 의미함.

- 국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국가재정지출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국고보조금의

연평균 증가율과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있음**19)**

**자료**: 기획재정부, e-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www.gosims.go.kr, 검색일 : 2022.10.25. 기준).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국고 |  | (국고보조금의 재원분담 및 관리체계) 정부가 위임한 정책과 이에 수반하는 예산이 투입된 국고보조사업 |

보조금 제도가 활발히 운용되는 상황

-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 비용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지원하기에 지방자치

단체는 지방비(matching fund)를 확보해야 함

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1.7조원에서 30.8조원으로 증가한 반면에 지방

부담률은 31.9%에서 29.2%로 감소 추세임**20)**

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<표 11> 국가-지방 분담 비율 추이 | (단위: 억원, %) |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**21)** |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|  | | --- | | **구분** |   총 국고보조사업 규모(A+B) | **2017**   681,493 | **2018**   736,352 | **2019**   853,442 | **2020**  941,514 | **2021**  1,056,030 |
| 중앙정부부담(A) | 464,318 | 501,763 | 588,444 | 655,956 | 748,016 |
| 지방비부담(B) | 217,175 | 234,589 | 264,998 | 285,558 | 308,014 |
| 지방부담률(B/(A+B)) | 31.9 | 31.8 | 31.0 | 30.3 | 29.2 |

-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한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준보조율 체계 및 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 - 또한 관리체계 측면에서 ‘지방비부담협의’와 ‘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’를 통해 지방비 부담 협의 단계에서 국고보조사업별로 재원분담의 실태와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
 - 무엇보다 재원분담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정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는 것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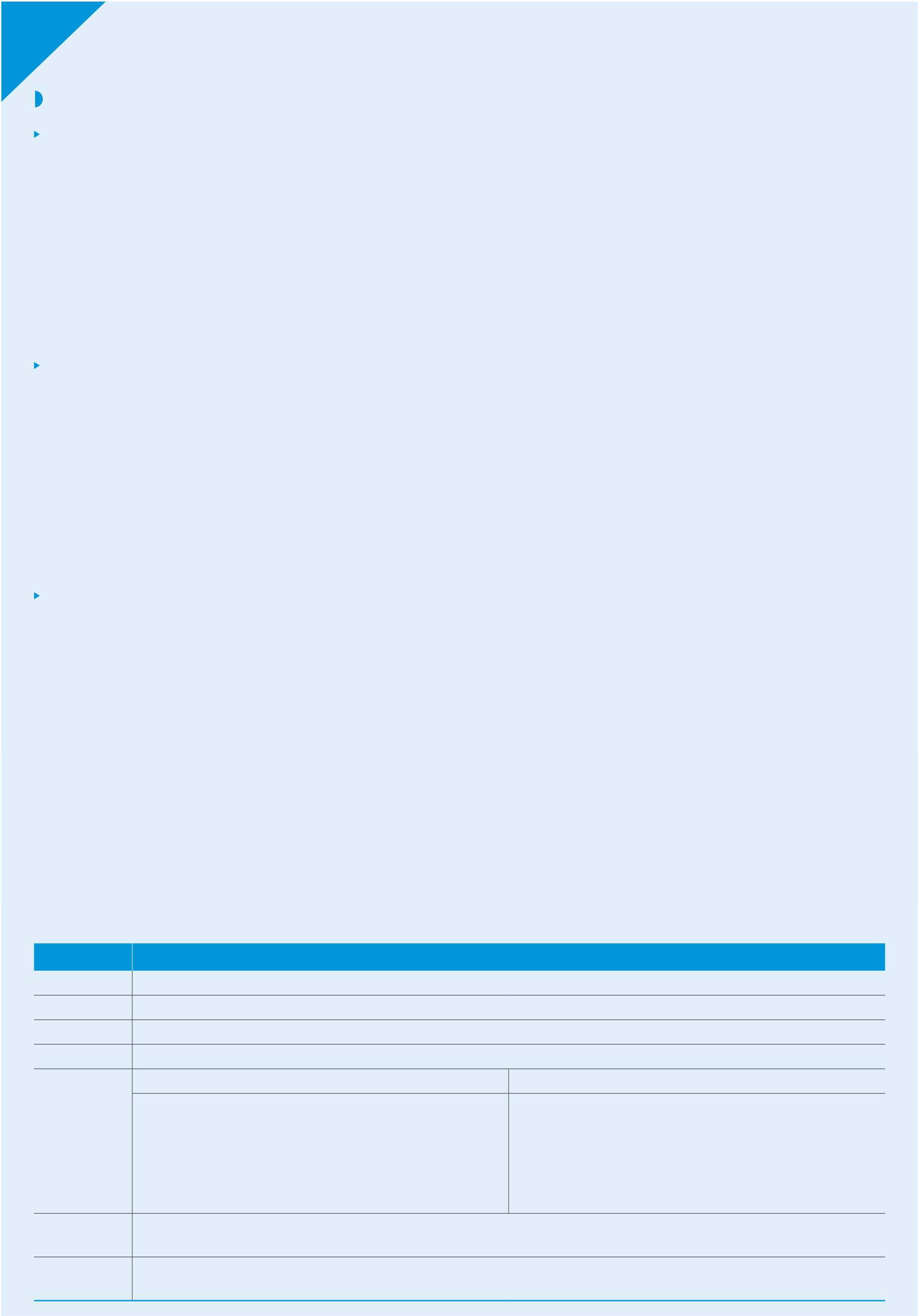
|  |  |
| --- | --- |
| **주** 1)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소계상한 중앙정부 부담 초과분을 조정한 통합재정사용액(본예산) 기준. 2) 행정안전부(2021), 「2021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(상)」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참고함. | 바람직함 |

**자료**: 한국재정정보원(2022.3), 「2022 주요 재정통계」, p.95.

 (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확대)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규모의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

간 지속 가능한 재정분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- 전체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2019년 59.2%까지 오른 바 있고,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54.4% |  | **17)** 김우림(2021)은 정부 총지출에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바, 사회복지 분야 지출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|
| 를 차지하고 있음 |
| - 인구고령화 관련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하는 추세, 정부의 기초연금 개정, 아동수당 신설 등 신규사업 추진과 | 사업예산 증가가 높다는 배경하에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파악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 이외 류민정(2020), 이재완(2021) 등이 사회복지 분야 |
|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. |
| 수급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 사업예산에 기인 | **18)** 김우림(2021), p.7. |
| **19)** 기획재정부(2022), p.13. |
|  | **20)** 일반적으로 매칭 지방비 규모는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측면과 중앙정부 예산편성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|
| 규모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(김우림, 2021). |
| **21)**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 상위 10대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중 향후 2024년 10개 사업의 합계예산은 2020년 |
| 대비 35.7% 증가(연평균 7.9%)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(김우림, 2021). |
|  |

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참고** | **중앙-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주요국 사례 : 프랑스22)** | **나가며** |

**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(개요)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와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|  | **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과 역할 변화 요구** |
| 조정해 주는 형평화로 구분할 수 있음 | 지방재정조정제도는 ‘자치분권’과 ‘지역균형발전’ 실현을 위한 재정정책적 수단에 해당 |

- (1979년) 경상비교부금(DGF)을 창설하여 재정력이 강한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에 차등 지원

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를 유지

- (2003년) 헌법개정 시 제72-2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

- (2010년대 이후) 비교적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

-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이 내재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짐 - 재원부족 해결과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가 중첩되어 운영되는 상태로 경제·사회·환경적 요인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

(특징) 규모의 측면에서 수직적 재정조정 위주로 이루어지며 이전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사용할 수 있는 경상비교부금(DGF: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)을 사용 |  | **바람직한 재정분권과 균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 모색** |
| -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|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모두 win-win 할 수 있는 정부 간 재정관계 정립이 필요 |
|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|
| - 바람직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해야 할 업무를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함 |
| - 2021년 경상비교부금(DGF)의 총규모는 267억 5,800유로이며, 2015년부터 인구수, 재정수요 등을 기준 |

으로 배분하고 재정위원회(CFL)를 통해 재정조정을 함**23)**   
(시사점)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함께 행정권한 이전과 재정분권을 병행 중  
 - 재정법 개정을 통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조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이 존재

-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저 생활 수준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역할 분담 가능   
 -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책임성 부과 측면에서 중앙-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는 당장의 부족 한 재원을 해결할 목적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형평성 확보 목적의 재정조정제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

- 특히 헌법적 근거,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운영, 협약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차후 우리나라의 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

개선에 유의미한 요소로 볼 수 있음

- 최근 재정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더 배분하기 위한 다양한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음

- 다만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처럼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것임에도 배분산식이 재정수요 기반인 주민 수와

면적 기준으로 배분되어 제도의 취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

<표 14>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 요약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구 분** | **세부내용** | |  | **22)** 프랑스 해외 사례분석을 위해 김행선(2017)의 「주요국 지방재정조정제도 연구」와 오승규(2019)의 「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」를 참고하였다. |
| 제도 발달 | 오랜 시간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 중심으로 발달, 비교적 최근 수평적 형평교부금 제도 논의 진행 중 | |
| 법적 근거 | 헌법 제72-2 | |
| 국세:지방세 | 약 7대 3 | |
| 지방자치구조 | 3단계 지방자치구조(권역, 도,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연합) | |
| 재정조정제도 | 수직적 재정조정(국가→지자체) | 수평적 재정조정(지자체 간) |
| - 대상: 교부금 및 보조금 배분 • 권역: 레지옹 조정교부금 • 도: 최소운영교부금, 도시조정교부금 • 기초자치단체연합: 꼬뮌연합체교부금 • 기초자치단체: 도시연대교부금, 농촌연대교부금 등 | - 대상: 특정 세입의 일부 또는 조성된 기금 배분  • 권역: 레지옹에 의해 징수된 재원의 국가조정기금   • 도: 유상취득세의 데파트망 단위 조정기금, 데파트망에서 징수한 기업부가가치세조정기금 등  • 기초자치단체연합: 꼬뮌연합재원형평국가기금  • 기초자치단체: 일드 프랑스 권역내꼬뮌연대기금 |
| 공통점 | - 중앙집권의 전통과 지방분권 추진 등 정책 방향과 비슷 | |
| -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처럼 주민 수와 면적으로 배분의 기준으로 삼음 | |
| 시사점 | - 행전안전부가 아닌 지방재정위원회(CFL)가 정한 법에 정해진 공론을 거쳐 배분 | |
| - 지자체 간 재정조정을 위한 수평적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 중 | |
| **23)** 지방재정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지방재정위원회(CFL: Comite′s des finances locales)라는 국가 차원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(오승규, |
| 2019). |
|  |



**참고문헌**

국회예산정책처.(2022).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재정.

기획재정부.(2022).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.

김성주·윤태섭.(2019).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.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 서 2019-09.

김우림.(2021).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. 국회예산정책처.

류민정.(2012). 정부 간 복지재정의 현황 및 시사점: 복지정책 관련 행·재정제도를 중심으로. 감사원 연구보 고서 2020-015.

류영아.(2020).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. 지역정책연구, 31(1): 1-21.

박혜림.(2021).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 및 적정 법정률 도출.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21-29. 이재완 외.(2021).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결정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.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.

정종필·권진택.(2019).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분석. 한국지방 재정논집, 24(3): 169-197.

탁현우.(2022).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·경제력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. 국 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.

한국재정정보원.(2018). 국고보조금 이해하기: 제도, 사업, 시스템.

\_\_\_\_\_\_\_\_\_\_\_\_\_.(2022). 2022 주요 재정통계.

행정안전부.(2022a).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(상).

\_\_\_\_\_\_\_\_\_.(2022b). 2022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.

허등용.(2018).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기능 분석과 재정분권정책에 주는 시사점.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과 제보고서 2018-06.

홍근석·김봉균·임정빈.(2021).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: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. 한국정책과 학학회보, 25(2): 147-173.

홍근석·여효성(2021). 환경변화에 대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: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.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정책보고서 2021-06.

기획재정부.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fiscal.go.kr)  
기획재정부. e-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www.gosims.go.kr)행정안전부.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(www.lofin.mois.go.kr)

|  |
| --- |
|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(www.fis.kr)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|